"국회유린 이명박정권 규탄" 민주당 손학규 대표, 박지원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들과 당원들이 8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국회유린 이명박 정권규탄 및 4대강 대운하 예산저지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민간 사찰서 스폰서 검사까지 野5당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압수수색 반발…4대 의혹 조사 촉구

민주당 등 야 5당은 검찰의 청목회 입법 로비 의혹과 관련한 국회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사태에 맞서 8일 '민간인 불법사찰, 대포폰, 그랜저 검사, 스폰서 검사' 등 4대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야 5당과 무소속 등 국회의원 112명이 이날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 민간인 사찰 관련 의혹 ▲(민간인 사찰 관련)컴퓨터 하드디스크 훼손 및 청와대의 대포폰 지급 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2008년 서울중앙지검 정모 전 부장검사의 그랜저 승용차 수수 의혹 ▲박기준 전 부산지검 검사장 및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등의 불법자금 수수 및 직권남용 의혹 등에 대한 조사 요구도 포함돼 있다.

야당 의원들은 국정조사 요구서에서 '청와대 대포폰' 조사 요구와 관련해 "이명박 정부가 불법 민간인 사찰을 은폐하기 위해 대포폰을 지급한 것으로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며 "총체적 검찰 비리를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와 함께 이번 국정조사를 위해 여야 의원 각 10명씩 총 20명을 위원으로 하는 특별위원회 구성도 제안했다.

이에 앞서 민주, 선진, 민노, 진보, 창조한국 등 야 5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된 민간인 사찰, 청와대의 대포폰 지급, 이른바 스폰서·그랜저 검사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미진할 경우 특검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된 요구사항에는 이번 사태에 대한 국회의장의 입장표명과 대책 요구, 긴급현안질의를 위한 국회 본회의 소집도 포함됐다.

이번 사태를 놓고 제1야당인 민주당의 입장이 가장 강경하다. 손학규 대표가 공개적으로 '전면적 정당연대'의 필요성까지 언급한 상태다.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야5당 합의안 이외에 "대통령 사과, 김준규 검찰총장 사퇴,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임 의혹의 배후 규명,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을 당론으로 요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김 총장이 자진사퇴하지 않을 경우 이귀남 법무장관 해임 건의안 및 김 총장에 대한 탄핵소추 결의안까지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예산 국회 대응 방침과 관련해선 일단 이날 소집된 상임위에 응하되 예산 심의는 최대한 저지하고 이번 사태 등 현안 추궁에 집중하기로 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상임위가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민주당 일각에선 예산국회 보이콧과 농성 등 초강경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지도부 등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국회 유린 정권 규탄 및 4대강 대운하 예산저지' 결의대회도 가졌다.

그러나 자유선진당이 대통령 사과와 검찰총장 사퇴 및 탄핵소추 요구 등에 대해 다소 유보적 입장이어서 야권 연대가 전면적 수준으로 진전될지는 미지수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소액 정치후원금 결국 말썽났다

이익단체 뭉칫돈 회원 명의 쪼개 입금
공공기관도 직원들 동원 정치권 로비
계좌 등록 누락 등 편법처리도 관행화

청목회(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 입법 로비 의혹으로 시작된 검찰의 국회의원 후원금에 대한 수사가 정국을 뒤 흔들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올 것이 왔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연말정산에서 전액 세액 공제가 되는 10만원 이하의 소액 후원금은 '다수 소액 후원금'의 활성화를 가져온 반면 정치권 일부에서는 후원금과 정치적 이익을 맞바꾸는 '악어와 악어새'의 행태가 관행화되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10만원 이하 소액 후원금을 둘러싼 정치권의 현실과 각종 편법 사례들을 조명해본다.

◇**이익단체 로비**=청목회의 이번 행태는 이익단체 입법 로비의 전형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국회의 각종 입법 과정에서 일부 이익 단체들은 적극적으로 로비를 펼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이익 단체들은 회원들의 소액 다수의 후원금을 내세우며 입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후원금이 필요한 일부 국회의원들도 정당한 절차에 의해 이뤄진다면 문제될 것 없다며 이익단체가 은밀히 제공하는 소액 다수의 후원금을 모르는체 하고 있는 현실이다.

오히려 일부 국회의원들은 보좌진들에게 후원금 모금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 이익단체와의 부적절한 관계가 형성되기도 한다는 후문이다.

민주당 모 보좌관은 "이익단체 관계자가 자신들과 관련된 입법을 앞두고 회원 명단과 후원금을 한꺼번에 가져와 개인별로 무통장 입금을 해달라고 돌려보낸 적이 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로비**=정부 산하기관 등 일부 공공기관에서도 10만원 이하 '개미 후원금'을 통한 정치권 로비에 나서고 있다. 좀 더 부드러운 국정감사와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국회 상임위 위원들과의 원만한(?) 관계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직원들에게 해당 상임위 위원들에게 10만원 이하의 후원금을 기부할 것을 요구해 종종 말썽을 빚고 있다.

실제로 농협중앙회는 최근 직원들에게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소속 의원들에게 10만원 이하의 소액 후원에 나서줄 것을 요구하는 업무 연락을 발송,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농수산식품위 소속 국회의원 보좌관은 "농협 등 일부 산하단체의 소액 후원금 기부는 어떻게 보면 관행화된 상황"이라며 "굳이 요구하지 않아도 과거부터 직원들을 동원한 후원금을 보내오고 있다"고 말했다.

◇**후원금 편법 처리**=18대 국회 들어 일부 이익 단체나 공공 기관에서는 소액 다수 후원금을 보내는 방법도 다양화 됐다.

한꺼번에 후원금을 보내지 않고 일정 기간별로 시차를 두고 10명~20명씩 나눠 보내 댓가성 후원금이라는 의심의 여지를 희석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이익 단체 관계자가 뭉칫돈과 회원 명단을 두고 가면 보좌진들이 은행으로 가서 개인별로 무통장 입금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후문이다.

여기에, 이익단체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게 회원들의 가족이나 친지들의 이름을 동원, 후원금을 보내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청목회 사태를 계기로 후원금 관련 제도를 다시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보다 투명한 후원금 제도를 마련,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박지원 "여권이 청목회 수사 방향 제시"

당·정·청 "사실무근…가이드라인 있을수 없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8일 청목회 입법로비 의혹 수사와 관련, 여권이 검찰에 사건 처리 방향을 제시키로 했다고 주장했으나 여권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 국회 법사위 법무부 긴급현안보고 등에서 "어제 당정청 회의에서 '형법상 뇌물수수죄는 확실한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적용하지 않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구속이나 징역형 구형보다는 불구속 기소와 벌금형 구형으로 완화하도록 검찰에 의견을 전달한다'고 한 것은 청와대와 정부가 검찰에 지시하면서 감독하고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 국회의원을 사찰했고 가이드라인까지 준 것은 중요한 검찰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9인회의에서 이런 말을 하고 결정하는 것 자체가 검찰을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인데도 오리발을 내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청목회 후원을 조사해 국회를 유린하지 말고 4대강 예산을 대폭 삭감해 환경과 국토를 보전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그런 회의에서 뇌물죄니 구속이니, 정치자금법 같은 얘기를 하겠느냐"라며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청와대 측 인사도 "그런 얘기는 전혀 없었다"고 일축했다.

이귀남 법무장관도 이날 국회 법사위 답변에서 "가이드 라인은 없다"면서 "압수수색은 검찰의 독자 판단으로 법무부 장관도 사전에 보고받지 못했다"라고 해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안상수 "수사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예산국회 앞둔 시점 압수수색 신중하지 못해"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8일 검찰이 청목회 로비의혹에 대해 여야 의원 11명의 후원회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 또다시 유감표명을 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의원사무실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서울 G20 정상회의와 예산국회를 앞둔 시점에서 압수수색과 같은 검찰의 수사방법은 신중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기소와는 다르다고 하지만 압수수색을 당하면 범죄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풍토에서 검찰은 불필요한 명예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의 적정 수단을 강구했어야 했다"며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불필요한 비난을 받지 않도록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해 마무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미 수사정황과 관련한 설이 흘러나오며 '카더라'식의 의혹이 양산됐다. 투명한 소액 후원금에 대해 과잉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정치권도 G20을 앞두고 국제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제 예산국회가 시작되는 만큼 국회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말고 본연의 임무를 다하는 게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길"이라며 "309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민생·서민예산 확보에 빈틈이 없는지 예산심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